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24. 11.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1. 총 괄 1

가. 세입예산안 1

나. 세출예산안 1

2. 세입예산안 내역 2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3

가. 총 괄 3

나. 인건비 4

다. 기본경비 4

라. 주요사업비 6

II.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5

1. 총괄: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15

가. 개 요 15

나.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17

다. 안티드론차량 제작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20
라.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21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	23
가. 개 요	23
나. 고용부담금 예산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23
3.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1231-301)	25
가. 개 요	25
나. 유지보수 대행용역 예산의 적정비목으로 변경 필요	25
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1231-304)	27
가. 개 요	27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27
5. 경호경비과학화(R&D)(1231-501)	29
가. 개 요	29
나. AI X-Ray 프로그램 조기 개발을 위한 증액 검토 필요	29
6.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2) ...	33
가. 개 요	33
나. 철저한 사업관리 및 결과물의 활용·보급계획 수립 필요	35

I.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괄

가. 세입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억 4,7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대비 1,500만원(2.8%)이 증액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입	532	547	15	2.8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세출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90억 9,8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50억 200만원(3.7%) 증액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세출	134,096	139,098	5,002	3.7

자료: 대통령경호처

2. 세입예산안 내역

2025년도 세입예산안 5억 4,7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와대 인근 주차장 부지의 사용 허가에 따른 토지대여료 수입(51-511)이 2024년과 동일한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둘째, 통신기지국 임대료 등을 수납하는 건물대여료(51-512)가 2024년 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셋째,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는 2024년 예산과 동일한 700만원,

넷째, 폐탄두, 폐차 등 재화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69-691)은 2024년 예산 대비 1,200만원(60%) 증액된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토지대여료 (51-511)	456	456	-	-
건물대여료 (51-512)	49	52	3	6.1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7	7	-	-
기타 잡수입 (69-691)	20	32	12	60
총 계	532	547	15	2.8

자료: 대통령경호처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가. 총괄

2025년도 세출예산안 1,390억 9,8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4년 예산 대비 3.1% 증액된 635억 7,7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 예산 대비 0.03% 증액된 180억 1,1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 예산 대비 5.7% 증액된 575억 1,000만원임.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감 (B-A)	%
인건비	61,668	46.0	63,577	45.7	1,909	3.1
기본경비	18,005	13.4	18,011	12.9	6	0.03
주요사업비	54,423	40.6	57,510	41.3	3,087	5.7
합계	134,096	100	139,098	100	5,002	3.7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인건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9억 900만원 (3.1%) 증액된 635억 7,700만원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보수(110-01)	61,259	63,134	1,875	3.1
연가보상비(110-05)	409	443	34	8.3
합 계	61,668	63,577	1,909	3.1

자료: 대통령경호처

다. 기본경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600만원(0.03%)이 증액된 180억 1,100만원임.

세부사업별로 보면,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6억 3,2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억 5,300만원(2.4%)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113억 7,9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억 4,700만원(△1.3%)이 감액됨.

그 중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의 증액은 상용임금(110-03) 1억 1,700만원, 일용임금(110-04) 2,500만원 증액 등에 기인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금액	비율
총액인건비 대 상	인건비(110목)	3,737	3,879	142	3.8
	운영비(210목)	1,279	1,240	△39	△3.0
	직무수행경비(250목)	736	764	28	3.8
	민간이전(320목)	727	749	22	3.0
소 계		6,479	6,632	153	2.4
총액인건비 비대상	운영비(210목)	8,820	8,359	△461	△5.2
	여비(220목)	757	858	101	13.3
	민간이전(320목)	1,590	1,590	0	0.0
	유형자산(430목)	359	572	213	59.3
소 계		11,526	11,379	△147	△1.3
합 계		18,005	18,011	6	0.03

자료: 대통령경호처

라. 주요사업비

1) 총 괄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30억 8,700만원 (5.7%)이 증액된 575억 1,000만원으로, 1개의 단위사업 「경호행사 지원(1231)」으로 구성됨.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금액	비율
경호행사지원(1231)	54,423	57,510	3,087	5.7

자료: 대통령경호처

2) 세부사업별 내역

가)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요인 및 국민경호 활동」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고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원(16.4%) 증액된 30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8,789	9,073	284	3.2	· 임차료(210-14) 2억 900만원 증
여비(220목)	1,358	1,641	283	20.8	· 국내여비(220-01) 2억 8,300만원 증
특수활동비(230목)	7,604	8,254	650	8.5	· 특수활동비(230-00) 6억 5,000만원 증
업무추진비(240목)	2,105	2,672	567	26.9	· 관서업무비(240-02) 5억 6,700만원 증
직무수행경비(250목)	2,501	2,844	343	13.7	· 특정업무경비(250-03) 3억 4,300만원 증
건설비(420목)	650	836	186	28.6	· 공사비(420-03) 1억 7,300만원 증
유형자산(430목)	3,196	5,191	1,995	62.4	· 자산취득비(430-01) 19억 9,500만원 증
합 계	26,203	30,511	4,308	16.4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검측·검식 등 안전관리 소모품 구입, 각종 경호 장비 수리 및 임차, 탄약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400만원(3.2%) 증액된 90억 7,300만원,

여비(220목)는 국내 경호작전 출장여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8,300만원(20.8%) 증액된 1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수활동비(230목)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호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활동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6억 5,000만원(8.5%) 증액된 8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240목)는 경호작전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억 6,700만원(26.9%) 증액된 2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직무수행경비(250목)는 경호 관계기관 인원 지휘 및 협조 확보 등에 소요되는 현장 소요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4,300만원(13.7%)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비(420목)은 경호상황실 등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8,600만원(28.6%) 증액된 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형자산(430목)은 경호장비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9,500만원(62.4%)이 증액된 5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경호장비시설개선(1231-302)

[2025년도 경호장비시설개선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1,808	1,883	75	4.1	· 일반수용비(210-01) 1억 4,4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200	-	△200	순감	· 연구용역 종료
건설비(420목)	11,642	10,294	△1,348	△11.6	· 공사비(420-03) 12억 600만원 감
유형자산(430목)	6,889	5,140	△1,749	△25.4	· 자산취득비(430-01) 17억 4,900만원 감
합 계	20,539	17,317	△3,222	△15.7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및 현직 대통령의 경내·외 경호경비시설을 개·보수 및 구축하고 경호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2억 2,200만원 (△15.7%)이 감액된 17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경호경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납부, 관련 시설의 임차 및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7,500만원(4.1%) 증액된 1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첨단과학 경호경비체계 구축 관련 기술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용역 종료에 따라 2024년도 예산 2억원이 순감되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건설비(420목)는 노후화된 전·현직 대통령 경호·경비시설 개선 및 경비시스템 과학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억 4,800만원(△11.6%) 감액된 10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노후화된 경호경비, 특수통신, 검측 등 장비의 교체와 드론 등 신종위협에 대비한 과학경호시스템의 신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7억 4,900만원(△25.4%)이 감액된 5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경호업무정보화(1231-303)

[2025년도 경호업무정보화(정보화)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운영비(210목)	1,254	1,766	512	40.8	· 관리용역비(210-15) 4억 3,600만원 증
연구용역비(260목)	150	950	800	533.3	· 일반연구비(260-01) 8억원 증
유형자산(430목)	2,585	1,273	△1,312	△50.8	· 자산취득비(430-01) 13억 1,200만원 감
합 계	3,989	3,989	-	-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정보화」 사업은 경호업무 정보화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동일한 3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210목)는 전산소모품 및 전산망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억 1,200만원(40.8%) 증액된 17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용역비(260목)는 경호업무 전산화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원(533.3%) 증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경호정보보호시스템 및 경호정보망시스템의 개선과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억 1,200만원(△50.8%) 감액된 1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라) 경호안전교육원 운영(1231-304)

[2025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인건비(110목)	38	44	6	15.8	· 일용임금(110-04) 600만원 증
운영비(210목)	1,725	1,838	113	6.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300만원 증
보전금(310목)	5	6	1	20	· 포상금(310-03) 100만원 증
건설비(420목)	473	463	△10	△2.1	· 공사비(420-03) 1,000만원 감
유형자산(430목)	451	342	△109	△24.2	· 자산취득비(430-01) 1억 900만원 감
합 계	2,692	2,693	1	0.04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은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00만원(0.04%) 증액된 2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안 비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110목)는 경호안전교육원 훈련시설 도장공, 녹지대 관리, 식당 조리 보조 등을 위한 일용직 고용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15.8%) 증액된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운영비(210목)는 각종 교육원 기본 운영 및 교육물품 임차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300만원 (6.6%) 증액된 1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전금(310목)은 위험물질 관독능력 경연대회 및 경호처장배 사격 대회의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20%) 증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건설비(420목)는 경호안전교육원의 각종 교육훈련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Δ 2.1%) 감액된 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형자산(430목)은 경호교육훈련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900만원(Δ 24.2%) 감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 경호경비과학화(R&D)(1231-501)

[2025년도 경호경비과학화(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500	1,500	1,000	200	·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 예산 반영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경비과학화(R&D)」 사업은 보안검색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2)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B-A)		주요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500	1,500	1,000	200	·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 예산 반영

자료: 대통령경호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및 5G 등 국가전략 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Ⅱ.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총괄: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가. 개 요

대통령 경호처는 2025년도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총 129억 5,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상세내역
일반수용비(210-01)	899	· 경호작전 · 훈련 소모품, 응급의약품 등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7	· 경호작전 정보통신망 구성 등
피복비(210-03)	300	· 경호작전 · 훈련 피복비
임차료(210-07)	3,342	· 상황실, 장비, 차량, 숙소 등 임차료
유류비(210-08)	200	· 경호작전차량 유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87	· 차량, 장비 및 통제단 사무실 유지보수비
국내여비(220-01)	438	· 경호안전통제단 및 경호팀 출장여비
특수활동비(230-00)	1,500	· 특수장비 도입 및 보안 경호활동비 등
관서업무추진비(240-00)	676	· 경호작전 관계기관 업무협의 관련
특정업무경비(250-03)	150	· 경호작전 특정업무경비
실시설계비(420-02)	54	·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및 경호작전 대기실 조성 관련
공사비(420-03)	777	
시설부대비(420-05)	5	
자산취득비(430-01)	2,560	· 경호장비 및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조성 관련
합 계	12,955	

자료: 대통령 경호처 제출자료 재구성

첫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계기로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추진된 정상회의로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둘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정상회의로서 지난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경주)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요]

구 분	내 용
출범 배경	· 80년대 후반 ASEAN 국가만의 협력이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광역 지역협력체 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EU 통합, NAFTA 협상 종결 등 블록경제 대두, ASEAN의 대미 수출 증가로 미국을 포함한 협력체 결성 필요성 인식
주요 연혁	· 1989년 11월 제1차 각료회의 개최(호주 캔버라) · 1993년 11월 제1차 정상회의 개최(미국 시애틀) ·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한국 부산)
회원국 현황	· 한국, 미국, 일본, 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 멕시코 등 21개국 ※ 옵서버(3개 기구): 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제도포럼(PIF) 사무국
주요 의사결정체제	· (핵심절차) 고위관리회의(SOM) → 합동각료회의(AMM) → 정상회의(AELM)를 통해서 의사결정 · (분야별 장관회의) 통상, 재무, 관광, 중소기업, 식량안보 등 분야별 장관회의 정기 · 부정기적 개최
APEC 기본성격	·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협력을 추구하고 회원국 간 합의사항은 비구속적 · 기업활동 촉진을 목표로 역내 민간부문의 참여 확보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 재구성

나.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 129억 5,500 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세부사업인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에 함께 편성하였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7,678	26,203	30,511	4,308	16.4
다자간 정상회의	-	-	12,955	12,955	100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와 같이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예산에 통합·편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첫째,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른 경호대상인 대통령과 그 가족 및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일상적인 경호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의²⁾에 따라 대한민국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법적근거가 구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을 모두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할 경우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한계가 있고,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동 사업이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집행 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제약 없이 비목별 분류에 의한 제약만을 받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 및 범위와 달리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셋째, 해당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외교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3031-401)」 및 「2025 APEC 의장국 운영(3031-403)」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통령경호처 역시 지난 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1231-309)으로 편성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2025년도 외교부 소관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	-	6,854	6,854	100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운영(3031-403)	2,460	100,830	98,370	3998.8

자료: 2025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2023년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1231-309)	-	5,005	5,005	4,507	498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요에 따라 발생하는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3)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다자간 정상회의는 방한하는 국민에 대한 경호·경비 예산으로, 이는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의 예산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경호·경비 안전대책 활동 예산의 중복집행 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에 함께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 안티드론차량 제작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작전 수행 간 경호작전 장비 및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조성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430-01)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20억원이 ‘안티드론차량’ 제작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안티드론 차량’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다자간 정상회의 간 무인기 위협 및 자폭드론, 북한 오물풍선 등의 대공 위협 및 최근 트럼프 암살미수 사건 등 저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음.

[안티드론 차량 제작 사업 개요]



- 사업명 : 다자간 정상회의 대비 안티드론차량 신규 제작
- 사업내용 : 무인체에 대한 탐지·식별·대응의 통합작전 등 대공작전에 특화된 작전차량 제작
- 제작기간 : 9개월
- 사업비 : 2,000백만원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안티드론 차량 제작에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11월에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제작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비 도입·제작 등의 전 단계에서 사업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장비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티드론 차량 제작에는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에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작전을 위한 일회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경호업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라. 다자간 정상회의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예정된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신변 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할 예정임.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되고, 군·경·소방·해경·국정원 등 다 부처·기관 협동으로 약 2만명의 경호경비작전 동원 인력을 구성하여 공항·숙소 및 행사장 등에서의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할 계획임.

트럼프 암살미수 등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호환경 하에서 내년도 예정된 두 건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방문국 국가정상, 국제기구 대표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경호와 함께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비한 행사장의 경호·경비 및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우 대규모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이 없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 예정이므로, 정상회의 경호·경비 안전대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의 원활하고 조직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청 등 관계 공공 기관과의 사전 협조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정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억 5,300만원(2.4%) 증액된 66억 3,200만원임.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677	6,479	6,632	153	2.4
고용부담금(320-09)	580	727	749	22	3.3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고용부담금 예산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고용부담금(320-09)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200만원(3.3%) 증액된 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최근 4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고용부담금(320-09)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도 역시 9월말 기준 집행실적(221백만원, 집행률 30.4%)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고용부담금(320-09) 예산 및 집행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집행률(B/A)
2021년	613	580	33	94.6
2022년	623	551	72	88.4
2023년	705	580	125	82.3
2024년	727	221	-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의 높은 퇴직률과 더불어 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상 신원조회, 상대적으로 긴 면접 절차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담금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320-09)의 집행실적이 개선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집행실적과 내년도 예상소요를 감안하여 고용부담금(320-09) 예산이 적정 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3.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1231-301)

가. 개 요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원 증액된 30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17,678	26,203	30,511	4,308	16.4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0	1,769	1,800	31	1.8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유지보수 대행용역 예산의 적정비목으로 변경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안 18억원 중 7,900만원을 2024년 12월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호장비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고,

관리용역비(210-15) 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⁵⁾

종합하면, 해당 예산은 용역계약을 통해 1년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므로, 그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보수 대행용역 예산 7,9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가 아닌 관리용역비(210-15)로 변경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경호장비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 비목 변경 수정의견(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주요내용	예산안	예산 비목	
			~에서	~으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연간 유지보수 대행용역	7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관리용역비 (210-15)

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p.231

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1231-304)

가. 개 요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은 대통령경호처 및 경호지원부대 교육, 국내 외 경호 관계기관의 경호경비 관련 수탁교육을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00만원(0.03%) 증액된 26억 9,300만원임.

[2025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177	2,692	2,693	1	0.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55	380	380	-	-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경호안전교육원의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4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2021년도 1,000만원, 2022년도 1억 6,300만원 및 2023년도 1억 1,3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301백만원, 79.2%)을 감안하면, 연말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4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및 집행 내역]

(2024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본예산	세목조정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년	270	10	280	279	1
2022년	270	163	433	433	-
2023년	274	113	387	355	32
2024년	380	-	-	301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국제유가 및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에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이상고온 및 저온 현상에 따른 냉·난방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면,⁶⁾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2024년 6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2%로 최근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만큼 향후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1년 이후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으로 보인다. ...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와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또 다른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상고온 및 저온 현상에 따른 냉방수요의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pp.106-108)

5. 경호경비과학화(R&D)(1231-501)

가. 개 요

‘경호경비과학화(R&D)’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시작된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출연금(360-05목) 명목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원(200%)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호경비과학화(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360-05)	1,000	500	1,500	1,000	2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AI X-Ray 프로그램 조기 개발을 위한 증액 검토 필요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 특허⁷⁾를 등록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의 AI를 이용한 위험물 검출 등 보안검색 업무 효율화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임.

7) 대통령경호처가 등록한 특허명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4색 X-ray 장비를 활용한 원소의 판별방법 :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따라 X-ray 결과값 중 색상이 달라지는 원리를 보안검색 업무에 적용하는 기법
- ②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 대통령경호처 특허 검색기법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동 R&D 사업은 기존의 X-Ray 검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재래식 무기, 액체 위험물 및 위장무기류,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AI X-Ray 프로그램 개발 사업개요]



자료 : 대통령경호처

한편,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 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

[변경된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자료 : 대통령경호처

동 R&D 사업은 AI 위험물 탐색 시스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한 바 있음.⁸⁾

8) 국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붙임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p.344

-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단위과제 중 ‘빅데이터 구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경우 사업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⁹⁾

9) 참고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2)

가. 개 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은 경호대상자 및 국가요인에 대한 신종 위협 대응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異機種)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출연금(360-05목)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0억원(200.0%)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금액	비율
연구개발출연금(360-05)	-	500	1,500	1,000	2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160억원씩 분담하는 구조임.

[연도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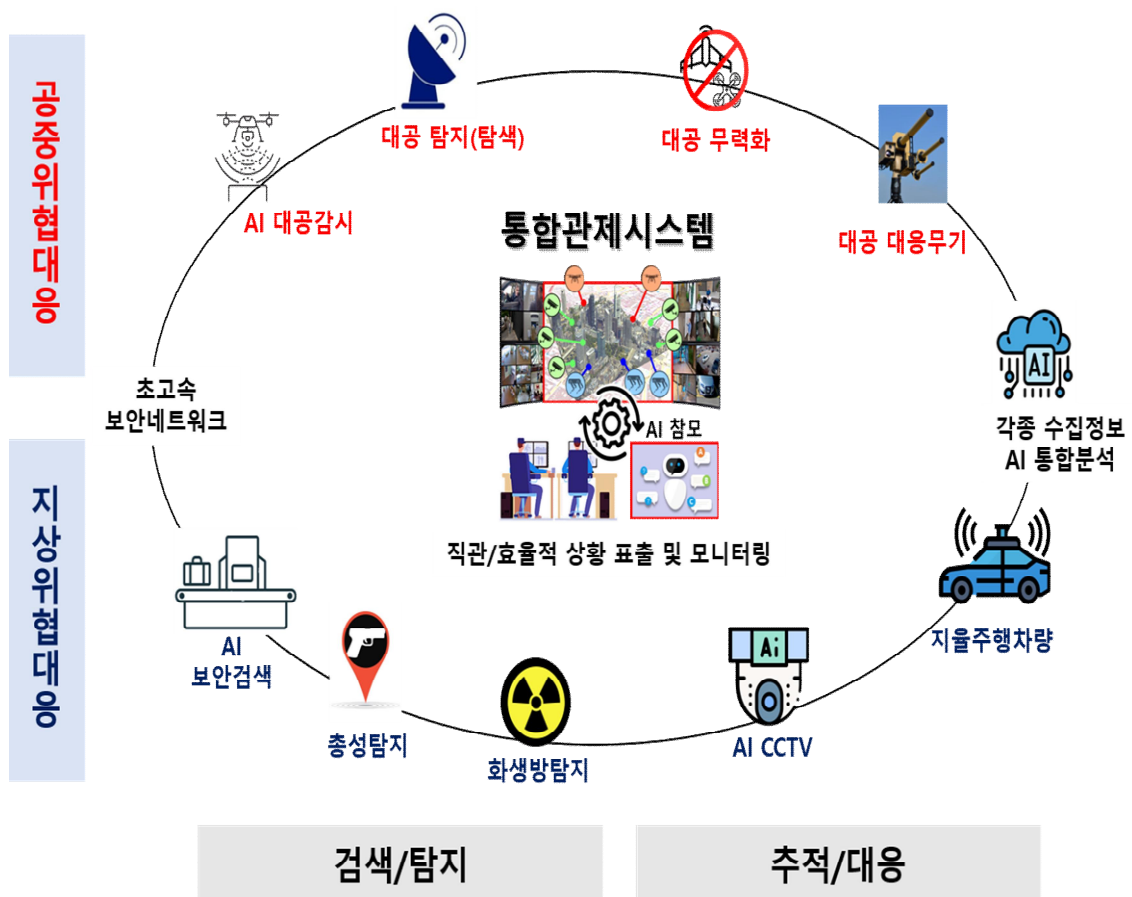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50%)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R&D 사업은 경비안전 수요부처(대통령경호처)와 R&D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기존의 단순 조합 형태의 관제 기술을 벗어나, 경비인력 대체와 안전수준 제고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관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이동형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개요]



자료: 대통령경호처

동 사업은 AI 통합관제,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실증지원 R&D까지 총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AI 통합관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각 과제마다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¹⁰⁾

[연도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구 분	내 용
AI 통합관제	· 국가요인 및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인 사전 예측 및 즉각 대응 가능한 입체적 경호 관제시스템 개발
무인기 통합대응	· 소형 저고도 무인기의 탐지·추적·식별 성능 향상 및 근무자의 피로도 완화와 물리적 대응 방안 마련
경비로봇	· 고정형 CCTV 음영지역 해소와 안정적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한 자율주행 경비로봇 기술개발
실증지원 R&D	· 세부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과제 ②, ③ 결과물을 과제 ① 에 통합) 및 경호·경비 환경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와 실증기술 개발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철저한 사업관리 및 결과물의 활용·보급계획 수립 필요

동 R&D 사업은 5년간 총 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당초 사업추진의 배경이 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AI 통합관제와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등 단계별 유기적 연계 방안과 함께 추후 R&D 결과물이 시제품 인증·표준화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동 R&D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단순 조합 형태의 관제기술을 벗어나, 인력 위주 경비시스템을 AI 통합관제

10) AI 통합관제 과제 사업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선정되었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경비안전 관제, 보안검색, 재난안전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복합 경비안전 기술로서 군·경·공항·항만·정부청사 및 각 공공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의 경비안전 기술 R&D와의 차별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할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은 국회, 법원 등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국가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국가기관과 R&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6